

“구명뗏목 설치 정부 보조 추진해야” ‘코로나 3법’ 국회 통과

의심자 검사 거부시 300만원 이하 벌금

낙시관리·육성법 시행령 따라 낙시어선 승선 인원 13명 이상인 경우 반드시 설치해야
나기학 도의원 “건조비용의 90%을 대출에 의존… 현업 종사중인 어민들 어려움 호소”

도의회 농산업 경제위원회 나기학 의원(군산·더불어민주당)이 낙시어선에 설치 의무화된 구명뗏목 설치 사업을 정부 보조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나 의원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낙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낙시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13명 이상인 경우 구명뗏목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구명뗏목 설치기간 등을 고려해 3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둔 후 4월부터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의원은 “최근 낙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내 낙시어선 이용객도 지난 2018년 24만5,936명에서 2019년 28만 8,016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신속한 구조 및 수습을 위한 정책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흔한 9.77톤급 낙시배의 경우 의무적으로 개당 200만원이 넘는 구명뗏목을 2개씩 구비해야 하는

데, 그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민들에게 뗏목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낙시배의 경제적 현실을 보면 어선을 신규로 건조할 경우 최대 7억 원까지 투자해야 하며 건조비용의 90% 이상을 대출에 의존하고 있어 어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나 의원은 “대부분 해상 장비들이 정부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듯이 구명뗏목 설치 사업도 정부에서 보조해줘야 한다”고 강력히 주

장했다.

나기학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신속한 구조 및 수습을 위해 구명뗏목 설치를 의무화한 만큼 어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된다”며 “국비지원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와 각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전북도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정부지원에 대한 합의점을 찾거나 추경을 반영해야하는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올 3월까지 연장한 계도기간을 연말까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사)군산시낙시어선협회에서도 지난 1월 31일 해양수산부에 ‘구명뗏목 관련 정부 보조사업에 대한 건의문’을 제출한 상태이다.

/김진성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대응을 위해 마련된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관련기사 4면>

여야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35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이나 어린이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염병 의심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관유한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

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31번 확진자처럼 폐렴 증상을 보였음에도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고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감염병 유행 시 방역·치료 필수 물품과 장비 및 의약품 수급이 부족해질 경우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검역법 개정안은 재석 234인 중 찬성 234인으로 통과됐다. 이 법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외국인이나 해당 지역 경유 외국인의 출입국 금지를 골자로 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37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의사가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장에 신고하는 등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과 차단을 위해 준수해야 할 운영 기준을 명시했다. /뉴스

4·15 총선 예비후보자 이모저모

이강래, 수년간 방치 도동동 KT&G 창고 활용방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예비후보(남원 입실 순창)는 수년간 방치된 도동동 소재 KT&G창고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008년 5월에 폐쇄된 담배원료공장이 10년 넘게 담배 잎 저장창고로만 활용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

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탈바꿈에 성공한 청주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남원이 보유한 풍부한 문화자산과 디지털 실감아트 콘텐츠 융합기술을 접목한 아이맥스(AMIX)전시관, VR(가상현실)게임산업을 개발하여 문화관광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협의를 거쳐 세부계획에 대해 함께 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특별취재반

임정엽 “특화된 임산물로 돈되는 산촌마을 키울 것”

임정엽 완주군 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전북 동부권의 청정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생활·생산’이 공존하는 산촌마을을 조성키로 했다.



임 예비후보는 26일 무주군 인근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무주는 전국 천마 생산량의 60%를 책임지는 ‘전국 1위’ 천마 주산지”라며 “특화된 임산물에 있어 돈 되는 산촌마을 사업을 추진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안군은 2016년 고사리 생산액이 49억,5000여만 원, 장수군도 오미자 생산액이 22억1,000여만 원을 기록

해 사업추진 기반이 탄탄하다”며 “관련 사업이 선례가 있는 만큼 좋은 결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강원도는 지난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손을 잡고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소득형 산촌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115억원을 들여 25평 규모의 복층 임대주택 70호와 임산물 재배·가공·유통이 가능한 임산물생산단지, 귀농산촌 인구 유치를 위한 산촌 체험장과 기숙사도 조성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산이 가진 경제적 가치에 주목한 임 예비후보의 ‘돈 되는 임업’ 육성 정책과 궤도를 같이하고 있다. /특별취재반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등 도의원들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지역 상생에 함께 하자는 제언하고 있다.

“대구·경북 확진자, 전북이 협력해 극복”

도의회, 코로나19 관련 지역 상생협력 제안

전북도의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전북이 협력해 극복하자”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구·경북 확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기간 협력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송성환 도의장 등 도의원들은 2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지역 확진자 중 병실이 없어서 자기격리 중인 일부 환자를 우리 지역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배려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

움을 주자”고 상생협력을 신중히 제안했다.

그러면서 “가장 힘들 때 도움을 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한다”며 “이러한 마음과 노력이 더해져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3월 추경 편성을 통해 감염병 예방과 경제적 고통을 겪는 도민

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에는 국가 지정병원인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2곳에 8개의 음압병실, 11개의 병실이 있으며, 이중 도내 환자 2명과 청도대남병원에서 이송돼 온 2명의 환자 등 모두 4명이 입원해 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